



지난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인사하며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7월 국회 열렸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7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상임위원회별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주요 상임위별 여야 의원 배정은 마친 상태다. 이와 함께 여야할 것 없이 법안 발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2일 현재 7월 국회가 시작한 6일 이후 접수된 법률안은 모두 358건이다. 이 가운데 의원 입법안은 327건이고, 정부 입법안은 31건이다.

특히 미래통합당이 6일 상임위 활동 선언과 함께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면서 7월 국회는 정상 가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통합당 상임위원 명단 제출 등 주요 상임위별 여야 의원배정 일주일만에 법률안 358건 접수

상임위별 여야간사 2곳만 선임 통합당 견제... 정보위구성 차질 7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 못해

당시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내일(6일)부터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에 참석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통합당은 7월 국회에서는 부동산 가격 폭등, 탈원전 전기료 급등, 인천국제공항 사태 등 민생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도 12일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민심이 아닌 문심(文心,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받들고 상생이 아닌 독재로 가고 있다. 통합당은 견제받지 않는 공룡여당의 오만과 독선에 국민과 함께 견제해 나갈 것"이라며 상임위별 주요 민생 법안에 대해 발표했다.

통합당이 발표한 주요 민생 법안은 ▲공정사회 실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극복 ▲경제활성·민생활력 ▲안심안보체계 구축 등 4대 중점 분야 10개 입법 과제다.

공정사회 실현 분야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이슈 관련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 개정, 정의기억연

대 기부금 유용 의혹이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레 방지 차원에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 의회민주주의 확립 차원에서 국회법 및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 등을 예고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분야에서는 민생 지원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세특례제한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 등을 예고했다.

경제활성·민생활력 분야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법·국토계획법·도시정비법·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안심안보 체계 구축 분야의 경우 북한의 대남도발 규탄 및 북핵폐기 촉구 결의안,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법, 북한인권법,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금지법과 함께 6·25전쟁 70주년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군사합의를 위한 입법 추진 등도 예고했다. 통합당은 이들 법안을 중점 과제로 삼아 처리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하지만 7월 국회 의사 일정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임위별 여야 간사가 없는 곳도 상당수다. 12일 현재 18개 상임위별 여야(더불어민주당·통합당) 간사가 선임된 곳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2곳에 불과하다. 남은 16개 상임위 중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5개의 경우 여당 간사만 선임한 상태다.

특히 정보위의 경우 여야 간사는 물론 위원장 선임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통합당이 국회부의장을 추대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국회법에 따르면 정보위원장 선출은 국회의장이 국회부의장 및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로 이뤄진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만 있는 만큼 정보위 구성에 차질이 생긴 셈이다. 결국 7월 국회가 열렸지만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당분간 개점 휴업 상태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농식품바우처 세종 등 4곳서 시범 실시

농식품부, 1.9만 가구에 예산 28억 4인 가구에 월 8만원 농산물 제공

1인 가구 기준 월 4만원의 우리 농산물을 제공하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시범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최종 대상지역으로 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 화성시·경상북도 김천시(이상 도농복합형)·전라북도 완주군(농촌형) 등 4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 적절성, 지역 푸드플랜·식생활교육과의 연계성 및 지자체 사업추진 역량을 우선 고려하는 등 서면평가와 전문가



농식품바우처카드 디자인(안) /농식품부

심층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대상지역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바우처 제도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보충적 영양지원과 아울러 우리 농·축산물 소비촉진 등 농식품 산업기반을 확장하는 게 목표다.

시범사업에서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 신청자에게 1인 가구 기준 월 4만원의 농식품 전자바우처를 9월~11

월까지 3개월간 지원한다. 2인 가구 지원금은 5만7000원, 3인 가구 6만9000원, 4인가구는 8만원 등이다.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 가구 수는 1만8640가구, 예산 규모는 전액 국비로 28억원 규모다.

농식품바우처 전용 전자카드로 지급되고, 시범지역의 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과 농협몰(온라인)에서 국내산 신선 채소, 과일, 우유, 계란 등 지정 품목만 구매할 수 있다.

농식품부 신우식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장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보충적 영양지원은 국민 영양망 확충과 의료비 절감 등 사회경제적 효과가 있으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계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와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hys@

육군 '차양 전투모' 9월 보급... 부대 밖 사용제한

예산 17억 들어 42만명에 보급 착용범위, 예산낭비 등 '도마위'

육군 '차양 전투모'가 오는 9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육군은 또 '차양 전투모'의 착용범위를 영내 및 작전활동 등에 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12일 입수한 군 내부 자료에 따르면, '차양 전투모'는 전투부대를 우선보급 순위로 하고 군교육기관에는 9월께 보급할 예정이다. 최근 일부 군교육기관은 하계군사훈련 등 착용소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소요를 제기했지만, 보급이 제한되는 상황이다.

◆군인복제령, 육군 군모 베레모로 묶여

지난 2011년 대통령령인 군인복제령으로 육군의 제식 군모로 채택된 '베레모'가 장병들로부터 한여름 더위 등에 답고 불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에 따라 육군은 '차양 전투모'를 추가보급 하는 것으로 지난해 결정했고, 같은해 12월부터 시험착용 등의 보급준비 과정을 거쳤다.

당초 계획은 미 육군의 편한착용감과 전투효용성이 높은 '패트론킵' 형태가 논의됐지만, 육군은 해·공군과 이질적인 형태를 따르기로 큰 차이가 없는 '볼캡(야구모자)' 형태가 적합하다고 결론지었다. '차양 전투모'의 계급장은 하사이상 간부도 금속제 철제 계급장보다 위장효과 등이 뛰어난 포제계급장으로 교체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육군 전투모의 변천. 왼쪽부터 한국전쟁 당시 사용된 M1951필드캡, 리지웨이스타일로 불린 1960~70대초의 광통전투모, 1970년대 중반~1980년대 초반까지 사용된 반강통전투모, 1980년~2011년까지 사용된 육군전투모, 미군 패트론킵 형태의 사제 전투모. /문형철 기자

하지만 육군은 해·공군이 사용하는 포제계급장 대신, 철제계급장을 채택했다. 다만, '차양 전투모'에 벨크로 방식의 사이즈 조정끈과 육군에 보급될 '아이웨어(보호안경)'를 고정하는 부품을 추가해 편의성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차양 전투모'를 육군 전 장병 42만명에게 1개씩 보급할 계획이며, 개당 가격은 약 4000원으로 17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현재 육군은 월 6만개씩 납품을 받아, 순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이지만, 군 소식통은 "코로나 19 외에 다른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돼 보급속도가 늦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올바른 보급취지 살려야

이 소식통은 "군 당국이 장병들을 위해 '차양 전투모'를 추가보급 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군복제령 등의 개정을 추진하지 못한 상황에서 '차양 전투모'를 추가 보급하는 것은 보급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차양 전투모'는 기본적 부대활동과 휴가 외출·외박 등 착용허용 범위

가 넓었지만, 군복제령에 정해진 육군의 제식군모가 베레모이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착용을 허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베레모는 일조량이 많고 고온다습한 몬순 기후대에선 불편해, 우리보다 먼저 베레모를 제식으로 채택한 미군은 패트론킵 착용이 더 일반적이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도 베레모는 정복 및 근무복을 입을 때 정모와 병행해 착용하고 전투복에는 패트론킵을 쓴다. 징병제 국가인 싱가포르의 육군에 베레모, 패트론킵을 보급하고 있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한 '중화민국(대만)' 육군은 패트론킵을 줄곧 보급해 왔다.

육군은 '차양 전투모'의 추가보급 결정 이전에는 체육 및 활동용으로 보급된 육군모를 개선하거나, 아미그린 색상의 정글모를 부대활동용으로 적용하려 했다는 점을 미뤄볼 때, 육군 수뇌부가 해외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계획 수립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문형철 기자 captinn@

LED 마스크 출시전 시험·검사 의무화

산업부, 관련 시행규칙 입법예고

앞으로는 LED마스크 등 가정용 미용기기와 '방한대'로 불리는 일반 마스크 출시전 사전 시험·검사가 의무화되는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3일 입법예고하고, '가정용 미

용기기'와 '방한대 마스크'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가정용 미용기기는 식약처의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않으면서 가정에서 미용기기 목적으로 사용되는 LED마스크, 플라즈마 미용기기, 눈마사지기, 두피관리기 등이다.

최근 많은 인기를 얻으며 판매되고 있으나 안정성 확인 절차 없이 판매되

면서 작년 12월 국무총리 주재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LED마스크 안전기준 마련을 권고하는 등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가정용 미용기기를 생활용품의 '안전확인' 품목에 포함시켜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국가가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사전 시험·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우선 LED마스크에 대한 예비안전기준을 마련해 지난달 24일 공고했고,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식 법령 체계 내에 반영시켰다. /한용수 기자